

2014

연구보고서-6

I S S U E P A P E R


여성에 대한 온라인 인권침해규제 개선방안


수행과제명 • 여성의 온라인 인권피해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과제책임자 • 이수연 선임연구위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여성에 대한 온라인 인권침해규제 개선방안*

수행 과제명  여성의 온라인 인권피해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과제책임자  이수연 선임연구위원

 Tel: 02-3156-7153

 e-mail: lsy4026@kwidimail.re.kr

요약

현재 온라인에서는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여성 온라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수사체계와 예방 정책 차원에 있어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함.

1 배경 및 문제점

- 온라인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성폭력, 스토킹, 명예훼손, 영상유포 등의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 현상은 그 빈도와 강도에 있어 관용의 정도를 넘고 있음.

* 이 이슈페이퍼는 다음과 같이 인용해 주십시오.

이수연·이혜림·김수아·이하얀(2014). 여성의 온라인 인권피해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윤리적 방심에서 기인한다고 여겨지는 가벼운 일탈행위부터 명실상부하게 범죄라고 부를 수 있는 행위들로 인해 온라인의 무질서와 혼란은 극심함.
- 더구나 SNS 같은 확산성이 높은 매체에서 인권침해의 피해는 더욱 심각함. 최근 유명인들의 사례에서 보듯 SNS에서 영상유포나 명예훼손은 한 개인의 인생에 치명적인 상처를 남길 수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인권피해에 대해 문제의식이 형성되어 있지 않고 이는 일반인뿐만 아니라 사건의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이나 법원에서도 마찬가지임.

- 대부분의 피해자는 인권피해를 받은 후 침묵하거나 온라인 활동이나 활동하는 사이트에 제한을 두는 정도로 소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음.
- 신고라는 적극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피해자는 소수임. 신고가 적용되어 해결이 되는 경우는 인권침해가 포털사이트나 커뮤니티 등 공연성이 있는 게시판에서 일어났을 때이고 이 경우 사이트 운영자는 게시물 삭제나 침해자의 글쓰기 제안 등으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음.
- 인권침해가 채팅 등 일대일 소통 시 일어났다면 사이트 운영자에게 신고를 해도 개입을 거부할 것이고 이 경우는 공권력에 호소하여야 함. 그러나 거주지역의 경찰이나 온라인수사대에 사건을 의뢰해도 경찰의 이해 부족으로 인해 범죄사건으로 접수하지 않을 가능성이 큼. 일선 경찰의 대부분은 여성이 겪는 온라인 인권피해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단순한 언어적 유희에 대한 과잉반응으로 치부하며 개인적으로 조심하거나 해결할 것을 제안하는 경우가 많음.

● 이처럼 여성이 온라인에서 겪는 인권피해가 국가의 수사체계에 의해 해결되지 않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형사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조사 및 분석결과

■ 설문조사

● 설문조사 방법

- 온라인 조사(Computer Assisted Web Interview)
- 2014년 5월 8일에서 30일 사이에 만 15세 이상, 50세 미만의 전국 남녀 2,043명을 대상으로 실시
- 주요 조사항목으로는 각 피해유형별(온라인 스토킹, 성폭력, 명예훼손·모욕, 영상유포) 피해 및 가해경험과 더불어 온라인 윤리의식, 응답자의 자존감과 스트레스 수준, 성역할갈등과 같은 심리적 상태에 관한 문항 및 응답자의 온라인 이용 패턴을 살펴보기 위한 문항 등

● 설문조사 결과

피해 시 대응방법

- 스토킹, 성폭력, 명예훼손/모욕/비방, 영상유포의 모든 유형을 통틀어서 ‘아무런 대응하지 않음’이 가장 많았고 두 번째 많은 응답은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등의 소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이는 피해자들이 인권피해를 당하면 당황하여 대응방법을 찾지 못하거나 효율적인 대응방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으로 보임.
- 스토킹 유형에서는 ‘아무런 대응하지 않음’ 621명(37.0%) 다음으로 ‘서비스 이용 안함’이 378명(22.5%)이 많았으며, 그 다음은 ‘서비스 신고센터 신고’ 15.7%, ‘서비스 완전 탈퇴’ 10.9%, ‘서비스 아이디 새로 만들기’ 6.2%, ‘항의 및 사과 요구’ 6.6%, ‘경찰 신고’ 1% 순임. 특히, ‘서비스 이용 안함’은 남성(160명, 17.3%)보다 여성(218명, 24.9%)의 응답자 비율이 많아 여성의 소극적인 대응 양상이 두드러짐. 즉, 여성의 피해대응은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등, 탈퇴하는 등 자신의 온라인 활동을 줄이는 면이 남성보다 많음.
- 경찰 신고는 1%에 불과했음.

〈표 1〉 스토킹 피해 시 대응방법(중복응답)

성별	아무런 대응하지 않음	서비스 이용 안함	서비스 아이디 새로 만들	서비스 완전 탈퇴	항의 및 사과 요구	서비스 신고센터 신고	경찰 신고	합계
남성	318 (41.3%)	160 (17.3%)	47 (5.2%)	83 (10.4%)	73 (8.8%)	145 (15.8%)	9 (1.3%)	1677 (100%)
여성	303 (36.1%)	218 (24.9%)	57 (7.0%)	100 (11.5%)	37 (5.4%)	119 (14.3%)	7 (1.0%)	
합계	621 (37.0%)	378 (22.5%)	104 (6.2%)	183 (10.9%)	110 (6.6%)	264 (15.7%)	16 (1.0%)	

- 온라인 성폭력 피해 시 대응방법에서는 역시 ‘아무런 대응하지 않음’이 609명(44.2%)으로 가장 많았음. 그러나 스토킹 유형에서와는 달리 두 번째 많은 응답은, ‘서비스 신고센터 신고’ 351명(25.4%)로서 적지 않은 수가 온라인 성폭력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서비스 신고센터 신고’ 이외에는 대부분 소극적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세 번째 많은 응답은 ‘서비스 이용안함’ 312명(22.7%)이었음. 다음으로, ‘서비스 완전 탈퇴’, ‘항의 및 사과 요구’, ‘서비스 아이디 새로 만들’, ‘경찰 신고’ 순인데 특히 경찰 신고는 0.5%에 불과했음.

〈표 2〉 성폭력 피해 시 대응방법(중복 응답)

성별	아무런 대응하지 않음	서비스 이용 안함	서비스 아이디 새로 만들	서비스 완전 탈퇴	항의 및 사과 요구	서비스 신고센터 신고	경찰 신고	합계
남성	354 (50.7%)	139 (17.7%)	39 (5.0%)	79 (10.8%)	47 (7.1%)	174 (23.3%)	3 (0.6%)	1379 (100%)
여성	255 (38.6%)	173 (25.4%)	35 (5.8%)	98 (15.4%)	35 (7.4%)	176 (26.2%)	3 (0.6%)	

성별	아무런 대응하지 않음	서비스 이용 안함	서비스 아이디 새로 만들	서비스 완전 탈퇴	항의 및 사과 요구	서비스 신고센터 신고	경찰 신고	합계
합계	609 (44.2%)	312 (22.7%)	74 (5.3%)	176 (12.8%)	82 (6.0%)	351 (25.4%)	7 (0.5%)	

- 명예훼손/모욕/비방 피해 시에도 ‘아무런 대응하지 않음’이 278명 (38.2%)으로 가장 많았음. 스토킹과 성폭력 유형과 마찬가지로, 명예훼손·모욕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거나 대응 방법 자체를 모르기 때문으로 보임. 두 번째는, ‘서비스 이용 안함’이 190명 (26.1%)으로 다음으로 많았으며, ‘서비스 신고센터 신고’ (19.5%), ‘항의 및 사과 요구(16.3%)’, ‘서비스 완전 탈퇴(12.1%)’, ‘서비스 아이디 새로 만들(6.2%)’, ‘경찰 신고’(1.3%) 순이었음. ‘아무런 대응하지 않음’이 남성이 172명(41.9%)으로 높은 비율을 보여 남성의 소극적 대응 양상이 두드러지고 ‘서비스 이용 안함’이 여성이 96명(29.5%)로 남성에 비해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음.

〈표 3〉 명예훼손·모욕 피해 시 대응방법

성별	아무런 대응하지 않음	서비스 이용 안함	서비스 아이디 새로 만들	서비스 완전 탈퇴	항의 및 사과 요구	서비스 신고센터 신고	경찰 신고	합계
남성	172 (41.9%)	94 (21.0%)	32 (6.5%)	40 (8.6%)	1 (100.0%)	98 (21.2%)	5 (0.9%)	728 (100%)
여성	106 (36.3%)	96 (29.5%)	14 (4.4%)	48 (15.0%)	1 (100.0%)	43 (14.0%)	5 (1.7%)	
합계	278 (38.2%)	190 (26.1%)	45 (6.2%)	88 (12.1%)	119 (16.3%)	142 (19.5%)	9 (1.3%)	

- 영상유포 피해 시에는 가장 소극적 대응 방법에 속하는 ‘아무런 대응하지 않음’과 ‘서비스 이용 안함’이 각각 14명(22.2%)으로 가장 많았음. 앞서 살펴본 유형들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이 대응 방법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거나 대부분 소극적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여성의 경우 ‘서비스 이용안함’ 다음으로, ‘서비스 완전 탈퇴’, ‘서비스 아이디 새로 만들’, ‘항의 및 사과 요구’, ‘서비스 신고센터 신고’, ‘경찰 신고’ 순으로 공적인 대응보다는 사적으로 온라인 활동을 축소하는 경향을 보여줌.

〈표 4〉 영상 유포 피해 시 대응방법(중복 응답)

연령대	성별	아무런 대응 하지 않음	서비스 이용 안함	서비스 아이디 새로 만들	서비스 완전 탈퇴	항의 및 사과 요구	서비스 신고 센터 신고	경찰 신고	합계
전체	남성	9 (22.0%)	11 (26.8%)	5 (12.2%)	4 (9.8%)	6 (14.6%)	2 (4.9%)	4 (9.8%)	61 (100.0%)
	여성	5 (25.0%)	3 (15.0%)	4 (20.0%)	4 (20.0%)	0 (0.0%)	3 (15.0%)	1 (5.0%)	
	합계	14 (22.2%)	14 (22.2%)	8 (12.7%)	8 (14.3%)	6 (9.5%)	5 (9.5%)	5 (7.9%)	

대응을 하지 않은 이유

- 전반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어떻게 대응할지 몰라서’가 가장 많음. 다음으로는 여성은 대응방법을 몰라서가 많은 반면, 남성은 신고를 해도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가 많았음.
- 스토킹 피해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서’가 총 226명(36.4%)으로 가장 많음. 다음으로 ‘신고를 해도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

지 않을 것 같아서'가 221명(35.9%)으로 비슷한 비율을 보였으며, 이어서 '신고나 처벌 절차가 번거로워서'가 157명(26.5%)이었음. '상대방의 보복이 두려워서'와 '다른 사람이 알게 될까봐 걱정되서'는 비교적 소수의 응답을 보임.

-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이유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방법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임. 또한, 여성의 절반인 47.9%(144명)가 대응방법을 몰랐다고 답한 반면 남성의 41.0%(130명)가 신고를 해도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대응하지 않았다고 답하고 있어 남녀 사이에 피해대응에 대한 태도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

〈표 5〉 스토킹 피해 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이유

성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서	신고나 처벌 절차가 번거로워서	상대방의 보복이 두려워서	다른 사람이 알게 될까봐 걱정되서	신고를 해도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합계
남성	82 (24.9%)	102 (33.3%)	2 (0.5%)	1 (0.3%)	130 (41.0%)	620 (100%)
여성	144 (47.9%)	55 (19.8%)	11 (2.9%)	2 (0.6%)	91 (28.9%)	
합계	226 (36.4%)	157 (26.5%)	13 (1.7%)	3 (0.4%)	221 (34.9%)	

- 성폭력 피해시 대응을 하지 않은 이유로는 '신고를 해도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로 응답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 다음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서(174명, 28.5%)'와 '신고나 처벌 절차가 번거로워서(163명, 26.7%)'순 이었는데, 스토킹 유형과 마찬가지로 대응 방법에 대한 지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신고나 처벌 절차가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대

다수가 소극적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성별로 보면 남성 모두 가장 많이 든 이유는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이었지만 두 번째로 여성은 ‘대응할지 몰라서’가 가장 많음.

〈표 6〉 성폭력 피해 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이유

성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서	신고나 처벌 절차가 번거로워서	상대방의 보복이 두려워서	다른 사람이 알게 될까봐 걱정되서	신고를 해도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합계
남성	83 (22.5%)	101 (29.4%)	1 (0.8%)	7 (2.2%)	164 (45.1%)	611 (100.0%)
여성	91 (34.8%)	62 (25.3%)	6 (1.9%)	4 (1.3%)	92 (36.6%)	
합계	174 (28.5%)	163 (26.7%)	7 (1.1%)	11 (1.8%)	256 (41.9%)	

- 명예훼손/모욕/비방의 경우 남성 중 가장 많은 66명(35.4%)이 ‘신고를 해도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여성 중에서는 31명(29.2%)만이 ‘신고를 해도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음. 여성이 가장 많이 언급한 응답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서’로 여성 45명(42.0%)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하였음. 반면에 남성은 49명(27.0%)만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서’라고 답하였음. 다음으로 가장 많이 선택한 항목은 ‘신고나 처벌 절차가 번거로워서’(77명, 27.7%)이었는데, 스토킹과 성폭력 유형과 마찬가지로 대응 방법에 대한 지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신고나 처벌 절차가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대다수가 소극적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표 7〉 명예훼손·모욕 피해 시 아무런 대응하지 않은 이유

성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서	신고나 처벌 절차가 번거로워서	상대방의 보복이 두려워서	다른 사람이 알게 될까봐 걱정되서	신고를 해도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합계
남성	49 (27.0%)	55 (35.8%)	0 (0.0%)	3 (1.8%)	66 (35.4%)	278 (100%)
여성	45 (42.0%)	22 (21.8%)	5 (5.4%)	2 (1.6%)	31 (29.2%)	
전체	94 (33.8%)	77 (27.7%)	5 (1.8%)	5 (1.8%)	97 (34.9%)	

경찰 신고 시 처벌 여부

- 전반적으로 경찰에 신고한 경우가 소수이고 신고를 하더라도 가해자가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비율이 높았음.
- 스톡킹 피해를 받은 사람 중 경찰 신고를 한 사람은 17명(6.4%)으로 응답자가 소수이긴 하지만, 이 중에서 88.2%(15명)가 자신의 가해자가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응답했다는 점에서, 앞서 살펴본 아무런 대응하지 않은 이유 중, 두 번째로 응답이 많았던, ‘신고를 해도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대응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현실에 근거한다고 볼 수 있음.

〈표 8〉 스톡킹 피해 시 상대방 처벌여부(경찰 신고)

성별	처벌 받음	처벌 받지 않음	합계
남성	0 (0.0%)	10 (100.0%)	10 (100.0%)
여성	2 (37.5%)	5 (62.5%)	7 (100.0%)

성별	처벌 받음	처벌 받지 않음	합계
전체	2 (11.8%)	15 (88.2%)	17 (100.0%)

($\chi^2=12.183$, $df=7$, $p=.095$)

- 성폭력 피해자 중에서는 7명, 즉 1.9%의 응답자만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나타남. 이 중 남성 1명, 여성 1명, 총 2명(28.6%)만이 가해자가 처벌을 받았다고 응답하였고, 나머지 5명(71.4%)은 처벌 받지 않았다고 답하여 역시 처벌을 받는 비율이 낮음을 보여주고 있음.

〈표 9〉 성폭력 피해 시 상대방 처벌여부(경찰 신고)

성별	처벌 받음	처벌 받지 않음	합계
남성	1 (12.5%)	3 (15.0%)	4 (14.3%)
여성	1 (12.5%)	2 (10.0%)	3 (10.7%)
전체	2 (28.6%)	5 (71.4%)	7 (100.0%)

- 명예훼손/모욕/비방 피해자 중 9명의 소수의 응답자만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남성 4명, 여성 1명, 총 2명(55.6%)만이 가해자가 처벌을 받았다고 응답하였고, 나머지 4명(44.4%)은 처벌 받지 않았다고 답함. 이는 스토킹이나 성폭력 피해에 비해 처벌률이 높다고 할 수 있음.

〈표 10〉 명예훼손·모욕 피해 후 상대방 처벌여부(경찰 신고)

성별	처벌 받음	처벌 받지 않음	합계
남성	4 (100.0%)	0 (0.0%)	4 (44.4%)
여성	1 (25.0%)	4 (75.0%)	5 (55.6%)
전체	5 (55.6%)	4 (44.4%)	9 (100.0%)

($\chi^2=21.055$, $df=14$, $p=.100$)

- 온라인 영상 유포 피해 후 경찰에 신고를 한 경우 처벌 여부에 있어서는 5명(8.1%)만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 중 남성 1명, 여성 1명, 총 2명(40.0%)만이 가해자가 처벌을 받았다고 응답하였고, 나머지 3명(60.0%)은 처벌 받지 않았다고 답하여 역시 처벌받지 않은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음.

〈표 11〉 영상 유포 피해 후 상대방 처벌여부(경찰 신고)

성별	처벌 받음	처벌 받지 않음	합계
남성	1 (25.0%)	3 (75.0%)	4 (80.0%)
여성	1 (100.0%)	0 (0.0%)	1 (20.0%)
전체	2 (40.0%)	3 (60.0%)	5 (100.0%)

($\chi^2=1.875$, $df=7$, $p=.171$)

신고센터 신고 시 처벌 여부

- 서비스 신고센터에 신고를 한 경우 가해자가 처벌을 받은 경우보다는 처벌을 받았는지, 받았다면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더 많음.
- 스톡킹 피해 시에는 어떠한 처벌을 받았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185명(64.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게시글 삭제, 서비스 이용차단 등의 처벌’, ‘어떠한 조치나 처벌 받지 않음’ 순이었음. 이처럼 서비스신고센터 신고 시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 경우는 모두 합해서 21.1%(46명)에 불과했음.

〈표 12〉 스톡킹 피해 시 상대방 처벌여부(신고센터 신고)

성별	게시글 삭제, 서비스 이용 차단 등의 처벌	어떠한 조치나 처벌 받지 않음	잘 모르겠다	합계
남성	26 (21.7%)	21 (18.4%)	98 (59.9%)	145 (100.0%)
여성	20 (20.4%)	12 (11.0%)	87 (68.6%)	119 (100.0%)
전체	46 (21.1%)	33 (14.7%)	185 (64.2%)	264 (100.0%)

($\chi^2=36.110$, $df=14$, $p=.001$)

- 성폭력 피해 후 신고센터에 신고를 하고도 어떠한 처벌을 받았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256명(72.5%)으로 성폭력 피해를 당한 후 신고 센터에 신고하는 것은 실효성이 크지 않음을 보여줌. 다음으로, ‘게시글 삭제, 서비스 이용 차단 등의 처벌’ 18.1%, ‘어떠한 조치나 처벌 받지 않음’ 9.9% 순으로 나타남.

〈표 13〉 성폭력 피해 시 상대방 처벌여부(신고센터 신고)

성별	게시글 삭제, 서비스 이용 차단 등의 처벌	어떠한 조치나 처벌 받지 않음	잘 모르겠다	합계
남성	34 (13.3%)	18 (13.7%)	123 (12.0%)	175 (12.4%)
여성	30 (11.7%)	15 (11.4%)	133 (13.0%)	178 (12.6%)
전체	64 (18.1%)	33 (9.3%)	256 (72.5%)	353 (100.0%)

($\chi^2=26.979$, $df=14$, $p=.019$)

- 명예훼손/모욕/비방 피해 시 서비스 신고센터에 신고를 하고도 어떠한 처벌을 받았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80명(55.9%)으로 이 역시 신고센터의 서비스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다음으로 응답 비율이 높은 항목으로는 ‘게시글 삭제, 서비스 이용 차단 등의 처벌’ 26.6%, ‘어떠한 조치나 처벌 받지 않음’ 17.5% 순으로 잘 모르겠다는 응답의 비율은 다른 유형에 비해 낮지만 어떤 조치나 처벌도 받지 않았다는 비율도 높았음.

〈표 14〉 명예훼손·모욕 피해 후 상대방 처벌여부(신고센터 신고)

성별	게시글 삭제, 서비스 이용 차단 등의 처벌	어떠한 조치나 처벌 받지 않음	잘 모르겠다	합계
남성	27 (29.5%)	19 (19.1%)	52 (51.4%)	98 (68.5%)
여성	11 (21.3%)	6 (20.0%)	28 (58.7%)	45 (31.5%)
전체	38 (26.6%)	25 (17.5%)	80 (55.9%)	143 (100.0%)

($\chi^2=9.000$, $df=7$, $p=.174$)

- 영상유포를 신고 센터에 신고한 경우는 전체 총 6명으로 다른 피해 유형에 비해 신고건수가 낮았음. 이 가운데 ‘게시글 삭제, 서비스 이용 차단 등의 처벌’, ‘어떠한 조치나 처벌 받지 않음’, ‘잘 모르겠다’가 각 2명(33.3%)로 어떤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기에는 응답수가 너무 낮음.

〈표 15〉 영상 유포 피해 후 상대방 처벌여부(신고센터 신고)

성별	게시글 삭제, 서비스 이용 차단 등의 처벌	어떠한 조치나 처벌 받지 않음	잘 모르겠다	합계
남성	1 (33.3%)	1 (33.3%)	1 (33.3%)	3 (50.0%)
여성	1 (33.3%)	1 (33.3%)	1 (33.3%)	3 (50.0%)
전체	2 (33.3%)	2 (33.3%)	2 (33.3%)	6 (100.0%)

($\chi^2=6.000$, $df=4$, $p=.423$)

■ 심층면접

● 심층면접 방법

- 여성의 온라인 인권피해가 어떠한 메커니즘으로 발생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2014년 3월부터 7월까지 총 14명의 온라인 인권침해에 따른 심각한 정신적, 물질적, 신체적 피해를 경험하였거나 가해를 한 적이 있는 여성 10명, 남성 4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함.

● 심층면접 결과 중 수사관의 태도에 관한 증언

- 경찰에 신고하는 과정에서 수사관들의 성별이 접수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데 남성 수사관들은 대체로 온라인 인권피해 상황을 가볍게 간주하고 법적으로 처리해주지 않는다고 함.

제가 그 때, 시골에 살고 있어서 시골 경찰분들은 그런 것 잘 안 해주시거든요. 흐지부지하게 넘어가니깐... 제 주변에 있는 사람이 똑같이 거의 비슷한 일 배라는 사이트에서 욕을 먹고 자기도 신고를 했었데요. 그런 게 그렇게 좋은 결과는... 그 사람은 남자였는데 딱히 해결되지 않았는데요. 그냥 신고만 한 거?... 사이버 수사대에 올려봤는데, 아무런 말도 없어요. 왜냐면 모든 게 다 들어오니깐요. 거기는, 사소한 것도 들어오니깐 신경을 잘 안 쓰는 것 같더라고요. 사이버 경찰청에 올린 지는 좀 오래 됐죠. 신고를 사이버 수사대에는 했는데 반응이 없어요. 거기는 원래 반응이 잘 없는 곳이에요. 사람들이 다 그래요. 사람들이 막 사소한 거 올리니깐.... 예전부터 댓글로 사람들이 알려줘요.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세요’라고 알려줘요. 그런데 사람들 댓글이 다 똑같았어요. 거기 신고해봤자 별것도 없다. 그냥 저 사람이랑 좋게 풀라는 그런 말도 있고, 다 그랬어요.... 직접 경찰에 가서는 안했어요. 어차피 안 될 것 아니까. (여성 1)

그래도 다행히 여성경찰관이 이 걸 진지하게 받아주셔서 ”심하네요.“ 하시더라고요. 남자일 경우에만 그렇게 수사관이 안 받아주는 거예요. 실제로 저한테 상담메일 같은 게 오는데, 직접 수사관하고도 통화한 적이 있어요. 피해자가 남성인데 뭐 이런 것 가지고 그러냐고 이거 성립 안 한다고 막 이런 거예요. (중략) 남자 수사관인거죠 다. 그런데 제 경우에는 저는 운이 좋았던 건지 어떤 건지 모르지만 여성 수사관님을 만나서 이걸 되게 심각하게 받아준 것도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중략) 검찰에 넘어갔을 때가 가관이었던 게 검찰 수사관이 남자였거든요. 합의하라는 거예요 그냥. 용서해주라고. (중략) 이 일을 겪으면서 있었던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너가 여자인데 유세 떨어져서 그런 거 아니냐 대접해달란 거 아니냐 그러한 주변의 인식. (여성 2)

심지어 이게 오프라인에서 일어났던 일이라고 할지라도 경찰을 정말 부르면, 그냥 너네끼리 잘 말하고 사과하고 끝내!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은 거예요. 우리나라 법이라는 게 일단 정말 그 사람 상대방한테 큰 죄 뒀을 치르게 하려면 그게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잖아요. 재판까지 가야되고... 일단, 돈도 들잖아요. 자기 변호사도 있어야 되고 근데 이게 제가 정말 정신적으로 치료 한 번 받아서 이거를 제 돈까지 들여가면서 그렇게 해봤자 또 제 손해인 것 같은 거예요. 솔직히 경찰에서도 누가 이렇게 신고를 하면 익명성을 보호해준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도 전혀 믿음이 안가고...그냥 정말 증거하나로만 그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다

고 했다면 신고를 했겠죠. 그리고 그런 게 설령 이런 일 뿐만 아니라도 사이버수사대가 뭐 출장을 한다고 해도 저는 정신적인 피해만 받은 거지 물질적으로 피해를 본 건 전혀 없으니깐...그리고 경찰도 어쨌든 남자 일수도 있으니깐. 여자로서 그냥 그런 얘기 자체를 한다는 게 수치심이 많이 들었어요. 저는... (여성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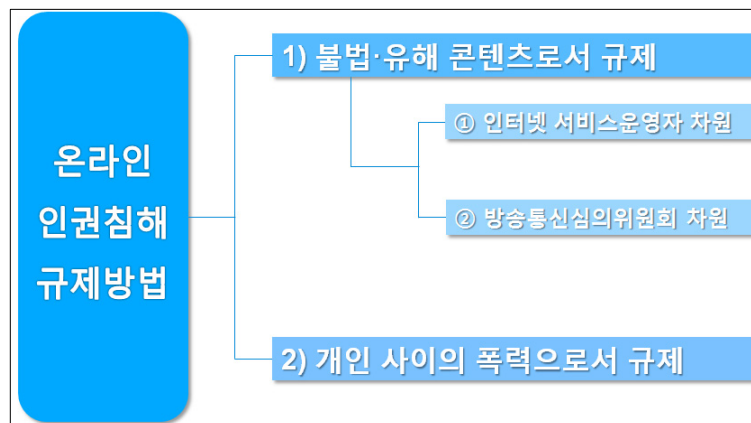
저랑 제 친구가 너무 화가 나서 경찰서를 찾아갔어요. 말씀 드려봤는데 신고 해봤자 경찰서에서도 신고를 했는데도 다 거기서 거기라고... 그렇게 큰 처벌을 못 받는다고... 학교 안에서 해결하라고... (여성 7)

그 때 많이 울었어요. 근데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이제 와서 얘기를 들어보니깐 이제... 별로 도와주지도 않는다... 경찰에 신고해도...신고기능은 없었어요. 딱히 그 때 사이버 수사대에서도 잘 없었고... (여성 9)

3 정책제언

■ 배경: 온라인 인권침해에 대한 규제 현황

- 온라인 인권침해에 대한 규제 방법은 불법 콘텐츠로서의 규제와 개인 간의 폭력으로서 규제로 크게 두 가지임.



- 인권침해 콘텐츠로서 규제는 사이트의 신고센터를 통해 이루어져 상대적으로 간단하지만 신고처리에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다는 신고가 처리되었는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음. 또한 신고할 수 있는 정보가 ‘공연성’이 있는 것에 한정됨.
- 개인사이 폭력으로서의 규제는 두 사람 사이의 대화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에 대한 것으로 경찰체계를 통해서 처벌이 가능함. 이 때 피해자가 신고를 해야 하는데 경찰에 신고를 하더라도 접수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접수가 되더라도 처벌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이는 현재 경찰청에 온라인에서 성과 관련 일어나는 폭력을 전담하는 부서가 없음. 온라인 범죄를 담당하는 사이버 안전국에서는 사이버 테러형 범죄, 사기 범죄, 개인정보 침해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성폭력은 주변적인 이슈로 간주함. 또한 온라인 성폭력은 오프라인 성폭력과 함께 성폭력 특별수사대의 관할로 되어 있는데 이 곳에서는 온라인 성폭력이 다시 주변적인 이슈가 됨.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제언을 하고자 함.

제안1) 온라인 성폭력을 경찰청 업무체계에 포함

- 온라인 성폭력을 경찰청 업무로 명시하고 이를 위한 조직과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특히 개인 사이에서 일어나는 공연성이 없는 일대일 폭력을 관장할 수 있는 유일한 기구가 경찰청이므로 이를 경찰청 업무로 명시하고 홍보해야 함. 또한 경찰청에서 관장하는 사이버 범죄 유형에 ‘사이버 성폭력’을 명시하여야 함.
- 온라인 성폭력을 전담하는 인력을 충원할 필요가 있음.
- 온라인 범죄 신고를 접수하는 일선 경찰에게 온라인 성폭력의 범죄성 및 관련 법령에 대한 교육을 시켜 온라인 성폭력을 신고하였을 때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함.

제안2) 여성가족부 성폭력 업무에 온라인 성폭력 범주를 포함

- 현재 여성가족부의 성폭력 업무는 오프라인 성폭력만을 다루고 있음. 이에 온라인 성폭력을 포함시키고 성폭력방지종합대책에도 온라인 성폭력에 대한 대책도 같이 수립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여성가족부가 관장하는 성폭력상담소의 업무를 온라인 성폭력까지 확장할 필요가 있음.
 - 성폭력상담소에서 온라인 성폭력의 특수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이나 매뉴얼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성폭력상담소에 들어온 온라인 성폭력 신고의 통계를 작성하여 온라인 성폭력의 추이를 파악하고 이에 따라 온라인 성폭력 전용 신고센터와 상담소의 필요성을 고려함.

제안3) 방송통신위원회의 온라인 인권침해 공동규제

- 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 윤리와 문화 등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부처임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인권에 대해서는 문제인식을 가지지 않고 있음. 온라인 인권을 담당하는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인터넷 윤리팀은 3-4명의 인원을 가진 작은 조직이고 그나마 여성의 온라인 인권피해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음. 현재 미디어 정책에서는 인권보다는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고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음.
- 오늘날 미디어 규제는 정부와 민간의 공동규제가 대세임. 온라인 인권침해의 문제도 방송통신위원회와 온라인 기업들 사이의 공동규제가 해답이 될 수 있음. 현재도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인 KISO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온라인에서 불법·유해 콘텐츠를 규제하는데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하지만 현재의 KISO는 회원수나 예산 등에 있어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는데 한계가 있음.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 인권문제에 좀더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자율규제기관의 협력을 끌어내는 것이 필요함.

제안4) 국가주도의 온라인 인권교육

- 현재 온라인 인권교육은 공교육 커리큘럼에 들어있지 않고 정보화 진흥원이나 인터넷 진흥원에서 산발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온라인에서 인권침해의 심각성과 이에 대한 사회의 인식부족을 고려할 때 좀 더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온라인 인권교육이 필요함.
- 여성가족부나 교육부에 온라인 인권교육 본부를 두고 총체적인 인권교육의 계획과 집행이 요구됨. 오늘날 온라인 이용시기가 점점 빨라지면서 초등교육 과정에서부터 온라인에서 성폭력이 아이들의 성별 특성에 따른 장난이거나 실제의 (신체적) 위험이 없는 무해한 성적 관심 정도로 치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동반하는 절대 행해서는 안될 범죄임을 온라인 사용원칙의 차원에서 주지시켜야 함.
- 현재 여성가족부의 업무로 되어있는 학교에서 성폭력 교육의 일환으로 온라인 성폭력 방지 교육이 시행되어야 함.

4 기대효과

■ 온·오프라인 성범죄 감소

- 현재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의 많은 부분은 성범죄에 해당함. 그럼에도 이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의 범죄성에 대한 인식이 낮고 피해가 심각함. 온라인 인권침해를 엄격히 규제함으로써 온라인 이용자들의 인식이 제고되면 온라인을 근거로 한 성범죄의 발생이 줄어들 것임.
-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성적 인권침해는 오프라인의 성범죄와 연결되는 경우가 많음. 예를 들어 온라인을 통해 성매매를 제안한 후 오프라인에서 성매매를 한다든가, 온라인을 통해 연락처를 알

아낸 후 오프라인에서 성추행을 할 수 있음. 오늘날 소통 통로로서 온라인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온라인에서 인권침해를 막으면 많은 오프라인 성범죄의 발생을 줄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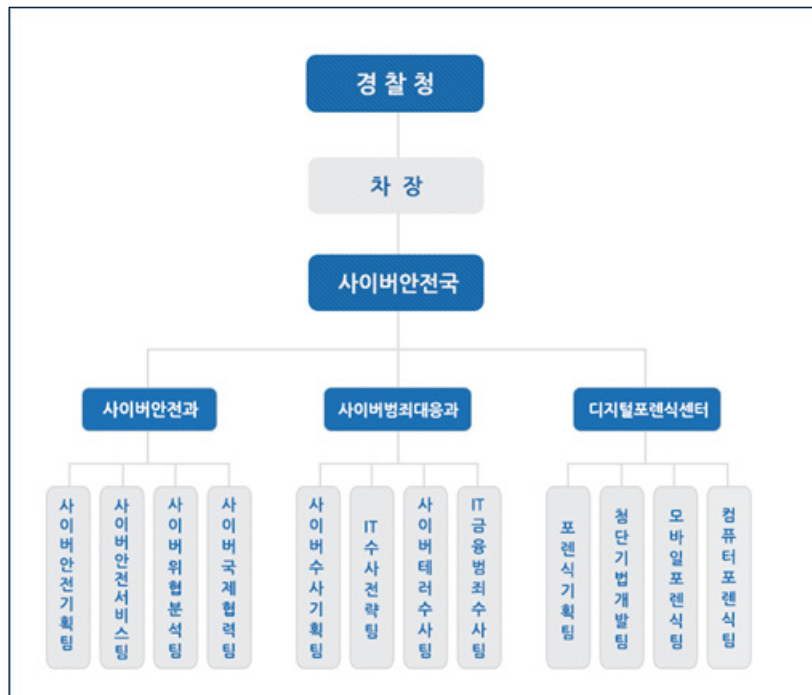
■ 온라인 문화 자정과 여성의 온라인 표현의 자유 증진

- 표현의 자유는 인류가 오랫동안 신봉한 가치인 것이 확실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높이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표현의 규제가 필요함. 예를 들어 온라인에서 특정 집단에 대한 비하적이고 혐오적인 발언을 허락한다면 그 집단의 표현의 자유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임. 현재 온라인에서 여성에게 행해지는 성차별·성폭력적인 표현 때문에 많은 여성들은 온라인에서 발언을 자제하고 나아가 온라인 활동을 줄이고 있음.
- 온라인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모든 집단이 평등하게 온라인에서 참여하고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함. 현재의 여성 혐오적이고 비하적인 온라인 환경을 성평등적이고 인권보호적인 환경으로 개선한다면 더 많은 여성들이 온라인 소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표현을 자유를 누릴 수 있음.

참고자료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의 조직도 (<http://ctrc.go.kr>)



주관부처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여성청소년과,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 방송통신위원회 온라인유통팀

관계부처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여성청소년과,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 방송통신위원회 온라인유통팀